

# 사회지출과 거시경제 변수간의 관계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penditure and Macroeconomic Variables*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률에 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며, 사회지출과 생산성·경제성장·물가 등 주요 거시 경제변수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된 바가 없었다. 여기서는 OECD 기준의 사회지출의 추이를 살펴보고,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지출은 노동생산성이나 경제성장률과는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회지출의 확대는 물가상승과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회지출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거시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사회지출의 크기뿐만 아니라 구성의 변화 또는 지출 구조조정에 의해서도 성장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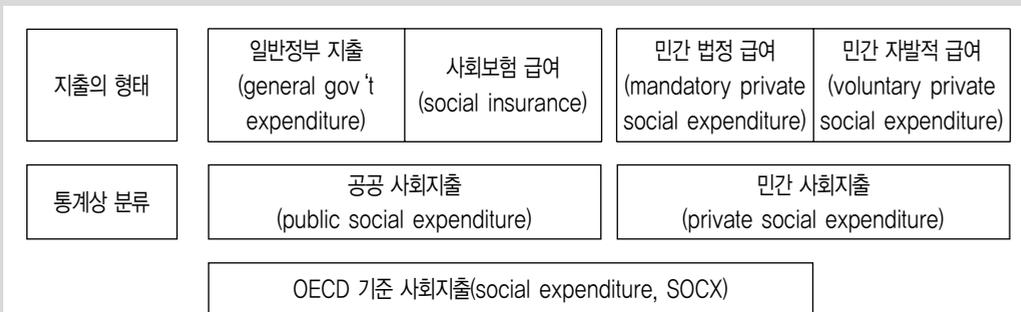
## 1. 서론

OECD의 사회지출(SOCX)은 ‘가계 또는 개인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였을 때 이들이 공공 또는 민간기관으로부터 받은 혜택이나 금전적인 도움 중에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공여하거나 또는 개인간의 계약이나 이전(individual contract or transfer)의 형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하는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sup>1)</sup>

*“The provision by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of benefits to, and financial contributions targeted at, households and individuals in order to provide support during circumstances which adversely affect their welfare, provided that the provision of the benefits and financial contributions constitutes neither a direct payment for a particular good or services nor an individual contract or transfer. (OECD 2007, p. 6)”*

1) OECD (2007), *The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n Interpretive Guide, SOCX 1980~2003*, June.

그림 1. OECD 기준 사회지출의 범위



주: 일반정부지출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의 지출을 합한 것임.  
 자료: 고경환 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1990~200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SOCX는 1990년대 초부터 OECD에 의해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가장 최신 자료는 2007년 6월에 발표된 'SOCX 2007'이다. 여기에는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3년까지의 사회지출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이후 해마다 사회지출 통계자료를 OECD에 제공하고 있다.

OECD의 사회지출(SOCX)은 공공부문의 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에 민간부문의 법정 사회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을 더한 것이다. 실제로 사회지출 통계는 각국 정부가 사회복지 차원의 재분배(re-allocation)를 위한 노력의 정도를 국가간 비교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이다.

OECD에서는 사회지출 외에도 총사회지출과 순사회지출 개념도 사용하고 있다. 총사회지

출(gross social expenditure)은 사회지출에 민간부분의 자발적 사회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을 더한 것이다. 반면 순사회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은 총사회복지지출에 이전소득 수혜자가 부담하는 직접세 및 간접세를 차감하고 대신 그들이 향유하는 각종 조세혜택을 더한 것이다. 따라서 조세부담이 조세혜택보다 크(작)다면 순사회지출은 총사회지출보다 작아(커)지고, 조세부담이 조세혜택과 같다면 순사회지출과 총사회지출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sup>2)</sup> OECD에서 순사회지출을 추계하는 주된 목적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귀속되는 분배 몫(주로 GDP에 대한 비율로 표시됨)을 포괄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sup>3)</sup>

OECD는 2003년 판 SOCX Database를 발표하면서 사회정책 영역을 13개에서 9개로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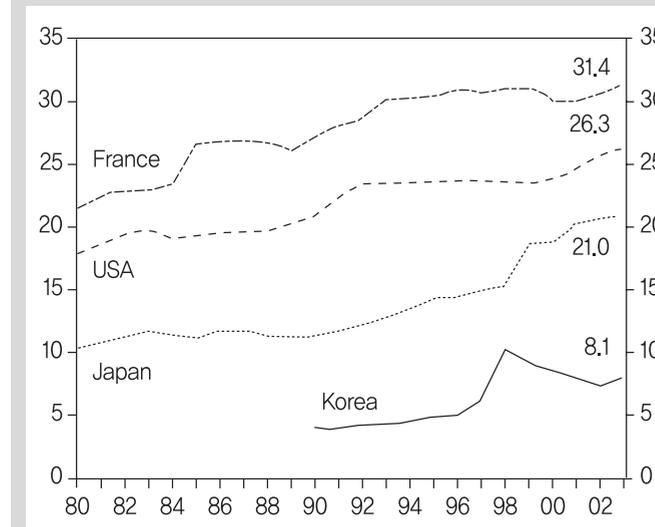
한 바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회정책 영역은 (1) 고령(Old age), (2) 유족(Survivors), (3) 장애, 산재, 및 질병(Incapacity-related benefits), (4) 보건(Health), (5) 가족(Family),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ctive labor market programmes), (7) 실업(Unemployment), (8) 주거(Housing), (9) 기타 사회정책(Other social policy areas)의 9개이다.<sup>4)</sup>

사회지출의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공공사회지출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 이유는 국가간 퇴직금의 분류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퇴직금을 민간법정급여로 분류하여 사회지출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퇴직금이 대부분 기업퇴직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회지출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OECD국가의 사회지출 추이를 개관하고, 사회지출과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 요약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 사회지출의 국제비교(1980~2003)



주: 1) 사회지출의 경상GDP에 대한 비율이며, 단위는 %임.  
 2) 그림 내 오른쪽에 표기된 값은 2003년도 수치임.  
 자료: OECD (2007),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http://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 2. 사회지출 추이와 구성

국가간 비교를 위하여 주로 OECD 사회지출의 GDP에 대한 비율을 사용한다. 여기서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사회지출 추이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1980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회지출(대 GDP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부터 '잃어버린 10년'에서 벗어나 사회지출이 높아진 반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경험한 1997년부터 2002년까지는 사회지출의 GDP에 대한 비율이

2)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이후부터는 해마다 순사회지출(net social expenditure) 통계도 함께 제출하고 있다.  
 3) Adema, W., and M. Ladaique (2005), "Net Social Expenditure, 2005 Edition,"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9.

4) 상세한 논의는 OECD(2007, p. 7) 및 고경환 외(2003),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1990~2001, p. 35 참조.

줄어들다가 2003년에는 다시 상승하고 있다.

### 1) 공공 사회지출 추이

OECD 회원국의 공공 총사회지출(gross public social expenditure)의 경상GDP에 대한 비율은 1980년 16%에서 2003년 21%로 높아졌다(28개국 기준의 평균값임). 특히 베네룩스 3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서 2003년 공공 총사회지출 비율이 1980년보다 높아졌다. 네덜란드는 공공 총사회지출의 GDP에 대한 비율이 4% 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특이한데, 그 이면에는 1990년대의 경

제성장, 장애연금의 수혜조건 강화 및 민영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sup>5)</sup>

1990년 이후 OECD 국가들의 공공 사회지출(불변가격)은 실질GDP보다 더 빨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을 끄는 나라는 일본인데 오랫동안 경제성장이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사회지출의 GDP에 대한 비율은 1990년의 11%에서 2003년의 18%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사회지출이 급증하는 이유로는 은퇴 인구의 증가와 건강지출의 급증을 들 수 있다. 더욱이 향후의 인구추계에 비추어 볼 때, 이들 두 요인에 기인하는 사회지출의 증가는 앞으로

표 1. 공공 사회지출 추이(대 GDP 비율)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스웨덴	28.6	29.7	30.5	32.5	28.8	31.3
프랑스	20.8	25.8	25.3	28.3	27.6	28.7
독일	23.0	23.6	22.5	26.6	26.3	27.3
영국	16.6	19.6	17.2	20.4	19.1	20.6
이태리	18.0	20.8	19.9	19.8	23.2	24.2
네덜란드	24.1	24.2	24.4	22.8	19.3	20.7
호주	10.9	13.0	14.1	17.1	17.9	17.9
일본	10.3	11.2	11.2	13.9	16.1	17.7
미국	13.3	12.9	13.4	15.4	14.6	16.2
멕시코	-	1.9	3.6	4.7	5.8	6.8
한국	-	-	3.0	3.5	5.1	5.7
OECD 평균	16.7	17.7	17.9	19.9	19.6	20.6

주: 1) 공공 사회지출은 일반정부의 사회관련 지출에 사회보험 급여를 합한 것임.  
2) 멕시코의 사회지출은 1985년 이후부터, 그리고 한국은 1990년 이후부터의 자료가 존재함.  
자료: OECD(2007), *Social Expenditure Database*.

5) OECD(2007, p. 17).

표 2. 공공 사회지출 및 실질GDP 증가율의 비교

(단위: %)

	실질GDP(%)		공공 사회지출(불변, %)	
	1980~2003	1990~2003	1980~2003	1990~2003
스웨덴	2.0	1.9	2.6	2.3
프랑스	2.2	1.9	3.9	3.0
독일	2.5	2.6	3.2	4.1
영국	2.5	2.4	3.8	4.2
이태리	1.8	1.4	3.6	2.3
호주	3.4	3.6	6.2	6.3
일본	2.3	1.1	4.9	4.9
미국	3.1	3.0	4.1	4.5
멕시코	2.4	2.9	7.5	9.4
한국	7.1	5.8	-	12.9

주: 멕시코의 사회지출은 1985년 이후부터, 그리고 한국은 1990년 이후부터의 자료가 존재함.

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OECD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노령연금은 GDP의 5%(1980)에서 6.9%(2003)로 증가하였으며, 건강관련 공공지출은 4.7%(1980)에서 5.9%(2003)로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가족관련 급여 또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은 2003년도 공공 사회지출을 나타내고 있다. 2003년 OECD국가의 평균 공공 사회지출은 GDP의 20.6%에 이르며, 현금급여가 서비스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국가별로도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멕시코와 한국의 공공 사회지출은 GDP의 약 6%에 불과하지만 스웨덴은 31%를 상회하고 있다.

공공 사회지출을 구성하는 가장 큰 항목은 연금(고령연금과 유족연금)인데 OECD국가의 평균치는 GDP의 7% 정도이다. 이 역시 국가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호주, 한국, 멕시코 등은 GDP의 4% 이내에 불과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약 12%에 달한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의 OECD 평균은 GDP의 6% 정도이고, 그 이외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2% 내외이다. 아동보호(childcare)에 대한 공공지원과 조기교육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GDP의 1%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역시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의 경우 GDP의 0.2%에 불과하지만 덴마크는 GDP의 2%에 달하고 있다.

### 2) 민간사회지출 추이

민간 사회지출은 민간 법정급여와 민간 자발적 급여를 합한 것으로, 1980년에는 OECD 평

표 3. 공공 사회지출의 구성(대 GDP 비율, 2003)

(단위: %)

	공공 사회지출	현금급여		서비스	건강		건강 이외
		연금	소득보전		건강	건강 이외	
스웨덴	31.3	15.4	8.0	7.4	14.5	7.1	7.4
프랑스	28.7	17.4	12.0	5.4	10.3	7.6	2.7
독일	27.3	16.3	11.5	4.8	9.9	8.0	1.9
이태리	24.2	16.5	13.8	2.7	7.0	6.2	0.8
영국	20.1	9.8	5.6	4.2	9.9	6.7	3.2
호주	17.9	8.7	3.4	5.3	8.7	6.2	2.5
일본	17.7	9.7	8.2	1.5	7.7	6.1	1.6
미국	16.2	8.4	6.2	2.2	7.6	6.7	0.9
멕시코	6.8	1.8	1.2	0.6	4.9	2.8	2.1
한국	5.7	2.2	1.3	0.9	3.3	2.9	0.4
OECD 평균	20.6	11.9	7.1	4.8	8.2	5.9	2.3

주: 연금에는 고령연금과 유족연금이 포함됨.

표 4. 민간 사회지출 추이(대 GDP 비율)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스웨덴	1.1	1.1	1.2	2.4	2.7	3.0
프랑스	0.6	0.7	1.9	2.1	2.5	2.7
독일	3.0	2.8	3.1	3.1	3.1	3.0
영국	3.6	4.7	5.2	6.8	7.8	6.8
이태리	0.8	0.9	3.9	4.1	2.1	2.3
네덜란드	3.9	4.8	5.8	6.6	7.4	7.7
호주	1.1	0.7	0.9	4.5	5.4	4.5
일본	0.1	0.1	0.2	0.3	2.7	3.3
미국	4.6	6.3	7.6	8.4	9.2	10.0
멕시코	-	0.0	0.1	0.1	0.1	0.2
한국	-	-	1.0	1.4	3.4	2.4
OECD 평균	1.2	1.4	2.0	2.6	2.8	3.0

주: 1) 민간 사회지출은 민간 법정급여와 민간 자발적급여를 합한 것임.

2) 멕시코의 사회지출은 1985년 이후부터, 그리고 한국은 1990년 이후부터의 자료가 존재함.

자료: OECD(2007), Social Expenditure Database.

균이 1.2%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현재에는 3.0%에 이르고 있다.

민간 사회지출 규모는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많이 민간에 의존하는가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 사회지출은 GDP의 10%(2003)에 이르지만 덴마크, 동유럽 국가, 멕시코, 스페인, 터키 등에서는 1% 내외에 머물고 있다(표 5 참조).

논의는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는 OECD의 SOCX 1980~2003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지출과 생산성·경제성장·물가의 관계를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1) 사회지출과 생산성

사회지출이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논리이다. 사회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그 세원을 주로 소비세와 사회보장세로 충당하

## 3. 사회지출과 거시경제

사회지출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관한 기존의

표 5. 민간 사회지출의 구성(대 GDP 비율, 2003)

(단위: %)

	민간 사회지출 (A+B)	법정지출 (A)		자발적 지출 (B)			
		고령	장애	고령	장애	기타	
스웨덴	3.0	0.6	-	0.6	2.4	2.0	0.3
프랑스	2.7	0.4	0.4	0.2	2.3	0.1	0.3
독일	3.0	1.2	-	1.1	1.8	0.8	0.1
이태리	2.3	1.8	1.2	0.5	0.5	0.2	0.0
덴마크	2.5	0.2	-	0.2	2.3	2.2	-
터키	-	-	-	-	-	-	-
스페인	0.3	-	-	-	0.3	-	-
영국	6.8	0.8	0.5	0.0	6.0	4.2	0.5
호주	4.5	1.2	0.5	0.8	3.2	2.5	-
일본	3.3	0.7	0.6	0.1	2.6	2.6	-
미국	10.0	0.4	-	0.2	9.2	3.8	0.3
멕시코	0.2	-	-	-	0.2	-	-
한국	2.4	2.2	2.0	0.1	0.2	0.0	0.0
OECD 평균	3.0	1.1	0.5	0.4	1.9	1.1	0.2

주: 1) GDP에 대한 비율(%) 이며, -표시는 0에 가까움을 의미함.

2) 법정지출(A)과 자발적 지출(B)은 '고령' 및 '장애' 외에도 '건강'과 '기타'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3.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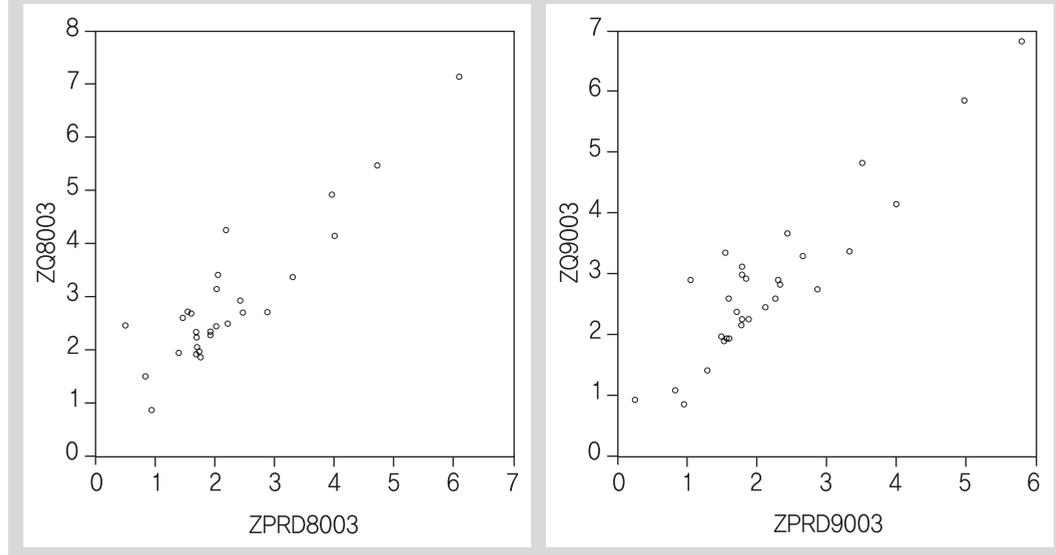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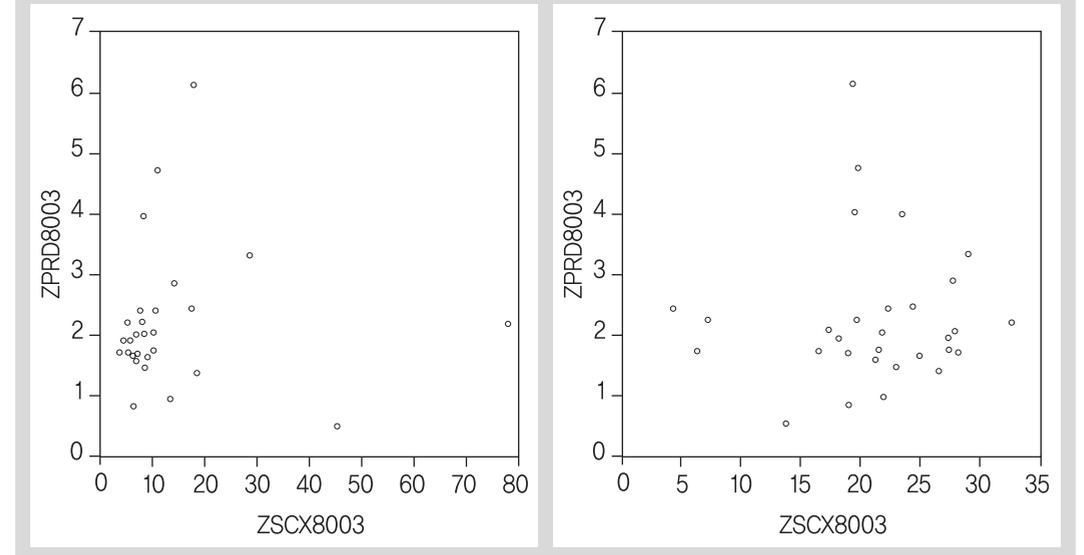


그림 4. 사회지출과 노동생산성



여 국민적 저항을 최소화하는 외에도 기업소득, 이윤,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은 노동생산성과 실질GDP증가율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축은 1980년부터 2003년까지의 생산성증가율을, 그리고 세로축은 실질GDP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자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 $r=0.9023$ )가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분석기간을 1990~2003으로 달리하더라도 강건성(robustness)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산성과 경제성장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지출과 노동생산성간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4]의 왼쪽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3년까지의 사회지출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평균값을 산포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는  $-0.005$ 에 불과하여 두 변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른쪽 그림은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사회지출의 대 GDP 비율과 실질GDP 증가율의 평균값을 산포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에도 역시 상관계수가  $0.041$ 에 불과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으로부터 사회지출 증가율이나 사회지출의 대GDP 비율은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2)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Cashin,<sup>6)</sup> Perotti<sup>7)</sup>)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Gwartney, *et al.*,<sup>8)</sup> Hansson and Henrekson<sup>9)</sup>)이 대립하고 있다. 높은 사회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복지국가들의 경우 낮은 파업빈도가 경제성장

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경우 사회지출은 대체로 생산성 증대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한다.

Wilensky(2005)에 따르면 1950~74 기간에 있어서 사회보장지출의 대 GDP 비율과 1인당 사회보장지출은 GDP를 증가시켰으며, 건강관련 공공지출 증가는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향상시킨다고 한다.<sup>10)</sup> 반면 Lindert(2004)

6) P. Cashin (1994), "Government Spending, Taxes and Economic Growth," IMF Working Paper, WP/94/92,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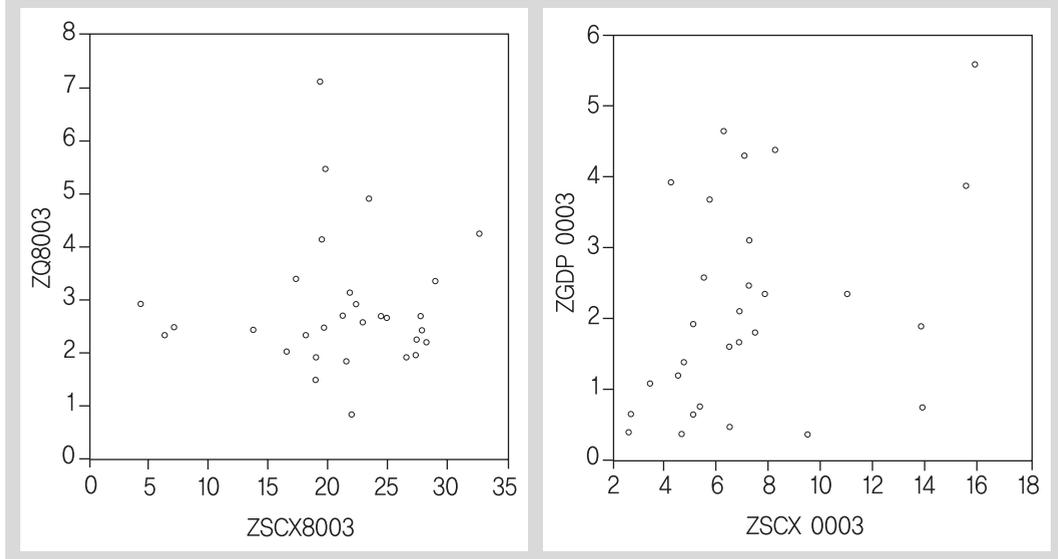
7) R. Perotti (1994), "Income Distribution and Invest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8, pp. 827~835.

8) J. Gwartney, *et al.* (1998), "The Size and Functions of Government and Economic Growth," Joint Economic Committee Paper, Washington, D.C.

9) P. Hansson and M. Henrekson (1994), "A New Framework for Testing the Effect of Government Spending on Growth and Productivity," *Public Choice*, vol. 81, pp. 381~401.

10) Harold L. Wilensky (2005), "Tradeoffs in Public Finances: Comparing the Wellbeing of Big Spenders and Lean Spenders,"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Symposium on Social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in OECD Countri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November 22, Seoul, Korea.

그림 5.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는 Atkinson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복지지출 확대가 경제성장, 고용, 생산성 어느 것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sup>11)</sup>

[그림 5]는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왼쪽 그림은 1980~2003 기간을 대상으로 사회지출의 대 GDP 비율과 경제성장률을 산포도로 나타낸 것이다. 오른쪽 그림은 분석기간을 2000년 이후로 제한한 결과인데, 두 경우 모두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간에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상관계수 또한 0에 가깝게 나타나 두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추

론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기존의 횡단면 연구에서도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간에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문헌은 찾아보기 힘들다. 많은 연구자들이 내린 결론은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sup>12)</sup> 이상을 종합하면 횡단면 분석에서는 사회지출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거나 혹은 저해한다는 1차적인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상관분석은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 없

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국가별로 사회지출과 GDP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Granger causality'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Granger에 의하여 도입된 'Granger 인과(Granger cause)' 분석법이란 'x가 y를 인과하는가'에 대한 여부는 '현재의 y가 과거의 y값들에 의하여 설명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새롭게 추가된 x의 과거치들이 y를 잘 설명하는가'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이다. 결국 '어떤 변수 x(가령 사회지출)가 다른 변수 y(가령, GDP)를 Granger 인과한다'는 표현의 의미는 x의 과거 값들이 y의 현재 값의 변화를 잘 설명함을 뜻한다.<sup>13)</sup>

이러한 Granger causality는 회귀분석의 틀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은 2변수 회귀 방정식을 생각해 보자.

$$y_t = \sum_{i=1}^k \alpha_i y_{t-i} + \sum_{i=1}^k \beta_i x_{t-i} + u_t \quad (1)$$

$$x_t = \sum_{i=1}^k \gamma_i x_{t-i} + \sum_{i=1}^k \delta_i y_{t-i} + v_t \quad (2)$$

복합가설  $\beta_1 = \beta_2 = \dots = \beta_k = 0$ 에 대한 F-통계량을 이용하여 Granger 인과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만일 이 복합가설이 기각되면 주어진 유의수준에서 'x는 y를 Granger 인과한다'고 한다. 그런데 만일 x는 y를 GC하고 y는 x를 Granger 인과하지 않으면 한 방향으로만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때 귀무가설은 '사회지출 수준(또는 GDP

수준)이 GDP 수준(또는 사회지출 수준)에 인과하지 않는다'이며, 검정통계량의 p-값이 0.05(0.01) 미만이면 유의수준 5%(1%)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표 6>은 대수변환한(log-transformed) 사회지출 수준과 GDP 수준이 서로 Granger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검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6>에 의하면 미국과 독일은 5% 유의수준에서 사회지출 수준과 GDP 수준이 서로 Granger 인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 스웨덴,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는 5% 유의수준에서 어느 방향으로도 그랜저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본(5% 유의수준), 영국(1% 유의수준), 이태리(1% 유의수준)는 실질 GDP 수준이 사회지출 수준에 Granger 인과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호주와 덴마크는 5% 유의수준에서 사회지출 수준이 실질 GDP 수준을 Granger 인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Granger 인과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지출과 GDP간의 관계는 나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는 고령화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 경제발전 단계, 현재의 사회지출 수준, 사회자본 등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회지출과 GDP의 관계를 분석하면 좀 더 흥미 있는 결과와 정책적 함의가 얻어질 것이다.

11) Peter Lindert (2004), *Growing Public: Social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since the Eighteen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 David R. Cameron (1982), "On the Limits of the Public Economy," *Annals, AAAPS*, vol. 459, January, pp. 46~62 및 홍석표 외, 『OECD 국가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24, 2005.

13)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x가 y를 Granger 인과한다'는 말은 논리학상 y가 x의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검정법을 현실에 적용할 때의 어려움은 검정결과가 포함된 시차의 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표 6. Granger 인과성 검정

국가명	p-값	국가명	p-값
미 국	SOCX → GDP, 0.029 GDP → SOCX, 0.008	스 페 인	SOCX → GDP, 0.642 GDP → SOCX, 0.125
스 웨 덴	SOCX → GDP, 0.655 GDP → SOCX, 0.120	프 랑 스	SOCX → GDP, 0.197 GDP → SOCX, 0.258
호 주	SOCX → GDP, 0.010 GDP → SOCX, 0.595	덴 마 크	SOCX → GDP, 0.030 GDP → SOCX, 0.400
캐 나 다	SOCX → GDP, 0.463 GDP → SOCX, 0.258	이 태 리	SOCX → GDP, 0.750 GDP → SOCX, 0.000
독 일	SOCX → GDP, 0.021 GDP → SOCX, 0.012	한 국	SOCX → GDP, 0.709 GDP → SOCX, 0.411
영 국	SOCX → GDP, 0.120 GDP → SOCX, 0.003		

주: 1) 귀무가설 중 SOCX → GDP는 SOCX가 GDP를 그랜저 인과하지 않음을 뜻하며, p-값이 0.05(0.01) 미만이면 5%(1%)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됨.  
2) 시차의 수는 3, 한국을 제외한 국가의 분석기간은 1980~2003이고, 한국은 1990~2003임.

### 3) 사회지출과 물가

사회지출의 대 GDP 비율과 인플레이션 사이에는 유의적인 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사회지출증가율과 인플레이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관계수 = 0.7740).<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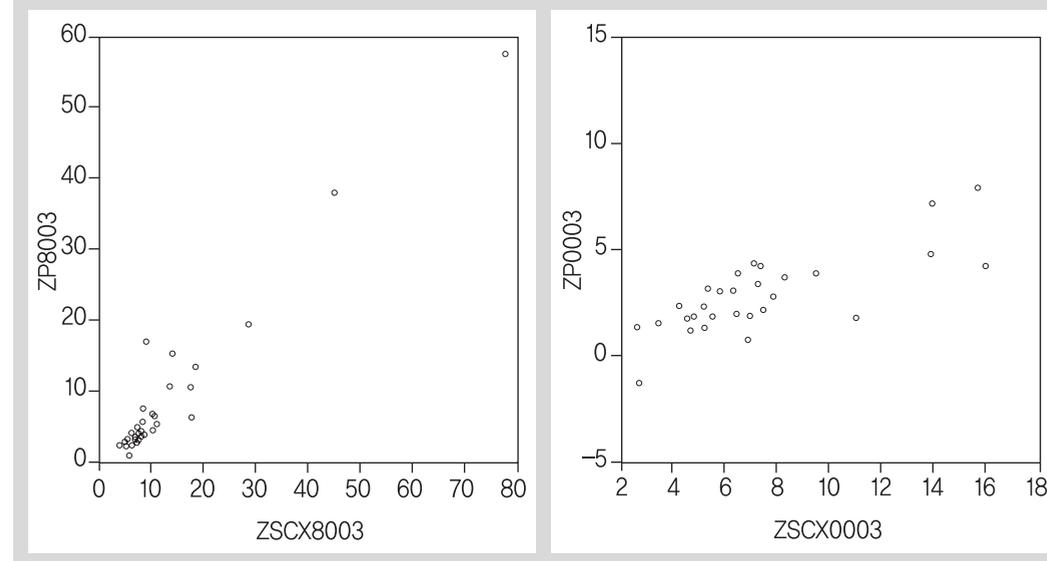
[그림 6]의 왼쪽은 사회지출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을 그린 것이다. 몇 개의 특이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상관계수가 0.9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양자 사이에는 장기적으로 정(+)의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의 오른쪽은 분석기간을 2000년 이후로 제한한 그림인

데, 여기서도 사회지출과 물가상승률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상관계수 = 0.77).<sup>15)</sup>

## 4. 요약 및 시사점

OECD의 사회지출(SOCX)이란 '가계 또는 개인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였을 때 이들이 공공 또는 민간기관으로부터 받은 혜택이나 금전적인 도움 중에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공여하거나 또는 개인간의 계약이나 이전(individual contract or transfer)의 형태를 제

그림 6. 사회지출과 물가상승률



외한 부분'을 말한다.

OECD의 사회지출(SOCX)은 공공부문의 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에 민간부문의 법정 사회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을 더한 것이며, 총사회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은 사회지출에 민간부문의 자발적 사회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을 더한 것이다. 실제로 사회지출 통계는 각국 정부가 사회복지 차원의 재분배(re-allocation)를 위한 노력의 정도를 국가간 비교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이다.

지금까지 OECD의 사회지출(SOCX)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지출과 노동생산성, 경제성장, 그리고 물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상관계수=0.90), 이러한

관계는 분석기간에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지출과 생산성 사이에는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지출과 경제성장률 사이에도 유의적인 관계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사회지출과 물가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지출 → 인적자본 축적 → 생산성 증대 →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파급경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얻기는 어려웠지만 사회지출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거시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중에는 정부지출을 사회지출과 비

14) 특이항 3개를 제외하는 경우의 상관계수는 0.690이다.  
15) 이러한 결과는 Wilensky(2005, p. 49)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

사회지출로 구분하여 분석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회지출과 비사회지출로 구분하여 생산성,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지출에 교육과 건강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지출에서 이들 항목을 분리하여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지출의 크기뿐만 아니라 구성의 변화 또는 지출 구조조정에 의해서도 성장의 내

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공부조와 실업급여보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가족에 중점을 둔 사회지출의 성장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sup>16)</sup>를 감안하면 이러한 정책들은 노동력을 강화시키고 빈곤의 여성화 및 소득불평등 해소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들을 포괄하는 좀 더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

16) Wilensky (2005, p. 65).